

06

인사 · 행정자치 · 경찰



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

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(☎ 02-2100-6613)

- 정부에서는 공직 채용에서 중앙·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
 - 그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5급 공무원 공채시험,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적용하였으나
 - 2015년부터는 7급 공무원 공채시험(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포함) 까지 확대 적용 할 계획입니다.
-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 · 중퇴하거나 재학 · 휴학 중인 사람이 해당되며
 - 5급 공무원 공채시험,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당초합격예정인원의 20%에 미달할 경우, 7급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포함) 공채시험의 경우 당초합격 예정인원의 30%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*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입니다.
 - * 5급 공채시험,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(1차 -3점, 2차 -2점, 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(10%)의 제한을 두지 않음)
 - * 7급 공채시험(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포함) (필기 -2점, 합격예정인원의 5%)

- ☞ (참고) • 국가법령정보센터> 공무원임용시험령
- 인사혁신처 홈페이지>정책자료>법령정보>훈령/예규/고시>균형인사지침 검색(지방인재 채용목표제)



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

행정자치부 주민과 (☎ 02-2100-3983)

- 2015년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.
 -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*하였으나,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고
 - * 영주권을 받아 국외이주 또는 현지이주 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
 -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(영주권자)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이 허용됩니다.
 -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등록됩니다.
- ※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재외국민 등록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

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

- 추진배경 : 재외국민의 국내활동 불편 해소 및 국민으로서 소속감 향상
- 주요내용
 - ① 국외이주자(이민출국자, 현지이주자) 주민등록 유지(거주자→재외국민)
 - ② 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(말소자→재등록, 미등록자→신규등록)
 - ③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변경(재외국민→거주자)
- 시행일 : 2015년 1월 22일

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 · 폐지

경찰청 생활안전과 (☎ 02-3150-1331)

- 경찰청에서는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시간을 축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완화하였습니다.
- 일반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**신입교육 시간** 중 입교식, 수료식 등 단순행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직업윤리 및 서비스 과목 등 매월 직무교육을 통하여 보완 가능한 과목의 교육 시간을 **완화**하였습니다.
 -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시간을 **현행 28시간(4일 소요)에서 24시간(3일 소요)으로 완화**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**경비업체**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· 임원 변경 등 **변경신고**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**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**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,
- **경비협회 설립** 시 요구되던 **발기인 5인 이상 요건을 폐지**함으로써 경비협회 설립과 관련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☞ 경찰청 홈페이지(알림마당)공지사항>경비업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개정 알림

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 · 폐지

■ 추진배경 : 경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

■ 주요내용

- ①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시간 완화(28시간 → 24시간)
- ② 경비업 변경신고 기간 완화(15일 이내 → 30일 이내)
- ③ 경비협회 설립제한 규정(발기인 5인 이상) 폐지

■ 시행일 : ①→'14.12.10, ②③→2014. 12월(잠정, 개정안 국무회의 대기중)

※ 국무회의 일정 : '14. 12. 23(화)

성폭력 · 학교폭력 · 가정폭력 · 실종 등 ‘사회적 약자’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

경찰청 여성청소년과 (☎ 02-3150-1391)

- 여성, 아동,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수사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.
 - 가해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,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,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.
- 이에, 경찰은 성폭력 · 학교폭력 · 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「여성청소년 수사팀」을 출범할 계획입니다.
 - 2015년 상반기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「여성청소년 수사팀」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,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여, 전면 시행됩니다.
- 새로 출범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기존 형사 등 다양한 기능에서 담당해 온 성폭력 · 학교폭력 · 가정폭력 및 실종 수사를 통합하여 전담함으로써,
 - 해당 분야에 특화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한편, 여성 · 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구 분	현 행	개 선
성폭력	형사, 성폭력전담수사팀	→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통합, 전문화된 수사 및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· 지원 역할
학교폭력	학교전담경찰관	
가정폭력	형사	
실종 · 가출	여성청소년과 형사	



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

경찰청 위기관리센터 (☎ 02-3150-2756)
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인상될 예정입니다.
- 지금까지 청원경찰법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,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, 30년 이상은 경사급의 보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2014년 12월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,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,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, 30년 이상은 경위급의 보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
- 2015년 7월 1일부터 위 개정 사항은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청원경찰법 제6조

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

- 추진배경 : 청원경찰 처우개선
- 주요내용
 - ① 보수단계별 재직기간 단축(경장급 : 15년 이상 30년 미만 → 15년 이상 23년 미만, 경사급 : 30년 이상 → 23년 이상 30년 미만)
 - ② 경위급 보수단계 신설(재직기간 30년 이상)
- 시행일 : 2015년 7월 1일